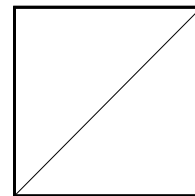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234 호
의 결 연 월 일	2023. 8. 30. (제 15 차)

의
결
사
항

삼성자산운용(주)에 대한
정기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※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제 출 자	위원장 김 주 현
제출 연월일	2023. 8. 30.

1. 의결주문

삼성자산운용(주)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삼성자산운용(주)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'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'의 사실이 적발되어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이라 함)」 제44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가.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

- 삼성자산운용(주) : 과태료 면제

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<붙임1>

다. 제재내용 공개안 <붙임2>

라. 관계부서 협의

- 제8차 제재심의위원회(2023.3.23.) 심의필
-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(2023.6.28.) 심의필
- 제15차 안건검토 소위원회 (2023.8.25.) 심의필

<별지>

삼성자산운용(주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1. 조치내용

☐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삼성자산운용(주) : 과태료 면제

- 조치사유 :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

- 법적근거 :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8호, 제449조(과태료) 제1항 제29호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87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4항 제4호, 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및 <별표22>.

2. 조치사유

가.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

☐ 집합투자업자(그 임직원을 포함)는 투자중개업자(그 임직원을 포함)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

- 삼성자산운용(주) ▲▲▲▲▲▲▲▲ 소속 운용역 2명은 '2X.X.XX. 및 '2X.XX.XX. ETF 주식대여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인 △△△△ ☆☆☆☆☆☆☆☆ ○○○○○○○○으로부터 X회에 걸쳐 총 XX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

(붙임1)

관계법규

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제85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.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제44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~28의2. (생략)

29. 제71조(제7호에 한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
30.~49. (생략)

②~③ (생략)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(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)가 부과·징수한다.

⑤~⑥ (생략)

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87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①~③ (생략)

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1.~3. (생략)

4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(그 임직원을 포함한다)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

5.~9. (생략)

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.

<별표 22> 과태료의 부과기준		
1. 일반기준		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		
2. 개별기준		
(단위 : 만원)		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터. 법 제71조(제7호에 한정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정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정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정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449조 제1항제29호	5,000

□ 금융투자업규정

제4-62조(집합투자업자의 이익수령 기준) ①영 제87조제4항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”이란 집합투자업자(그 임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(그 임직원 및 법 제51조제9항의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부터 제공받는 금전·물품·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.

②~③ (생략)

④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, 제2항에 따른 한도는 일정금액 범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

□ [금융투자협회]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

제2-68조(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)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 아니 된다

- 1. (생략)
- 2.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
- 3.~9. (생략)
- ②~③ (생략)

□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

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,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.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

- ② (생략)
-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<별표2>과징금 부과기준, <별표3>과태료 부과기준 및 <별표6>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자산운용과	자산운용검사국
연 락 처	02-2100-2662	02-3145-7630